
 금융위원회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24px; font-weight: bold;">보 도 자 료</div>		 금융감독원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 보도 </div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 2016.06.27.(월) 15:00 이후 </div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 배포 </div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 2016.06.27.(월) </div>

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weight: bold;">책 임 자</div>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신 진 창(02-2100-2990)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weight: bold;">담 당 자</div>	김 준 사무관 (02-2100-2994)
	기재부 자금시장과장 주 환 욱(044-215-2750)		김 해 련 사무관 (044-215-2752)
	행자부 지역금융지원과장 이 방 무(02-2100-4280)		류 병 욱 사무관 (02-2100-4286)
	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박 순 연(044-201-1751)		김 경 은 사무관 (044-201-1760)
	해수부 수산정책과장 최 용 석(044-200-5420)		구 도 형 서기관 (044-200-5429)
	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 윤 차 규(042-481-4190)		김 동 성 서기관 (042-481-4155)
	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 김 태 경(02-3145-7550)		한 홍 규 팀장 (02-3145-7447)
	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장 임 철 순(02-3145-8160)		박 광 우 팀장 (02-3145-8763)

제 목 : 2016년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

- 상호금융업권 현안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**

 - 상호금융 가계대출 현황 및 점검
 - 출자금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방안 등 논의

- 금융위원회는 6.27일(월), 15:00,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「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*」를 개최하여 상호금융업권 가계대출 현황 및 가계부채 대책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

* 상호금융 관계기관간 정책공조 강화를 위해 매 분기 기재부, 행자부, 농림부, 해수부, 산림청, 금감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

I. 상호금융 가계대출 현황 및 점검(신협·농협·수협·산림조합)

- (현황) '16.3월말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206.3조원으로 1분기중 2.9조원 증가하여 '15년 2분기부터 이어져오던 가파른 증가세는 다소 둔화*되는 모습

* 분기증감(조원):('15.1/4) 0.2 → (2/4) 3.2 → (3/4) 4.2 → (4/4) 4.8 → ('16.1/4) 2.9

- LTV 규제일원화*('14.8월) 이후 '15년중 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,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**('15.11) 이후 '16년 1분기 증가세는 다소 둔화

* LTV 규제를 전업권 70%로 일원화 → 상호금융 최대 85% → 70%

** LTV를 지역별·담보종류별 평균 경락가율을 기반으로 설정하고, 최저한도를 하향 조정(60%→50%), 가산비율을 하향 조정(15~20% → 10%)

※ 주담대 증감률(%):('14.4/4) 0.3 → ('15.1/4) △0.9 → (2/4) 0.1 → (3/4) 1.2
→ (4/4) 2.5 → ('16.1/4) 2.1

비주담대 증감률(%):('14.4/4) 2.5 → ('15.1/4) 0.9 → (2/4) 2.1 → (3/4) 2.6
→ (4/4) 2.7 → ('16.1/4) 1.4

- 비과세예탁금 연장 등으로 수신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권 '여신심사 가이드라인' 확대 시행('16.5) 등에 따라, 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

- '16.3월말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5.1%,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9.7% 수준

* 「가계부채 구조개선 추진방안('14.2.)」에 따라 상호금융권에도 비거치식 분할상환목표비율 도입('15년말 5% → '16년말 10% → '17년말 15%)

- (건전성) '16.3월말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.84%(주담대 1.32%, 비주담대 2.19%)로 대체로 양호한 수준

- 상황별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금감원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의 손실흡수능력도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

- (평가)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반적으로 **안정적인 수준**이나 부동산 경기에 취약한 **비주택담보대출 비중***이 높고,

* 토지·상가·오피스텔·빌라 등으로 전체 가계대출 중 57.4%를 차지

-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및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낮아 향후 부동산 경기침체, 금리인상 등 **경기변동에 다소 취약**

- (대응) 비주택담보대출 급증 조합에 대해 각 중앙회가 **LTV 준수 여부, 담보평가의 적정성** 등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, 그 결과를 **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**(9월 개최 예정)에 보고토록 조치

- 특히, 일부 상호금융조합 중심으로 취급이 확대되고 있는 **집단대출**에 대한 **모니터링을 강화**하고, **적절한 관리방안*** 강구

* 농협의 경우 개별 조합의 집단대출에 대해 중앙회의 사전심사 제도 시행중
→ 여타 상호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, 조합별 집단대출한도(전월말 대출잔액의 10% 이내) 도입 검토 등

- 다만, '16.3월말 상호금융업권의 총대출(258.8조원) 중 집단대출(2.9조원) 비중은 **1.1%**로 규모면에서 우려한 수준은 아니며,

- 연체율(1.27%)도 전체 대출 연체율(1.86%) 대비 **양호한 수준**으로 건전성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

-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확대를 위해 저조한 조합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전파 및 제도취지와 유인책* 등 적극 안내

* '15.12월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중 '정상'채권에 대해 충당금적립율 완화(1.0%→0.5%)
→ 충당금적립 감소분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우대금리 적용에 활용 가능(국민·우리 등 일부 은행에서 0.2% 우대금리를 부여하고 있음)

-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확대시행에 따른 **모니터링 강화**, 무리한 대출확대로 인한 **부실심사 방지**를 위해 **과당경쟁 자제** 및 **채무상환능력 심사 강화** 등을 지속 지도

II. 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방안

- (배경) 출자금은 예적금과 달리 원금손실 등 위험요인*을 내포하고 있으나, 이에 대한 **설명·안내가 미흡** → **불완전 판매 발생** 소지

* 예금자보호대상 제외, 탈퇴시에만 환급가능, 탈퇴 다음 회계연도에 환급청구 등

- (현황) '15년말 상호금융조합의 총출자금은 **20.3조원**으로 전체 조달자금(495.8조원)의 **4.1%**를 차지

- 최근 저금리 기조로 **배당수익률***이 예적금 이자율을 상회함에 따라 출자금이 **제테크 수단**으로 인식되면서,

* (상호금융조합 평균) 배당률 3.49%, 예금이자율 2.47%

- '15년중 출자금 증가율(10.0%)이 수신 증가율(6.5%)을 상회

- (문제점) 출자금은 **자본적 성격**으로 모든 상호금융조합에서 **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**하고 있고, 조합이 부실화될 경우 손실액 만큼 차감 지급되어 **원금손실 가능성***

* 다만, 신탁은 '17.1.1. 이후 납입되는 출자금부터 적용('16년말까지는 출자금 전액 지급)

- 출자금은 **중도인출 및 질권 설정이 불가능**하고, 환급청구도 탈퇴 다음 회계연도부터 가능하여 **유동성에 제약**

- 고객에 대한 **설명·의무 이행**을 확인할 수 있는 **동의절차 등 제도적 장치**가 없어 분쟁발생시 대응 곤란

- (개선방향) 고객이 출자금 가입 前 출자금의 위험요인 등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출자금에 대한 「**핵심설명서**」 제도를 도입

- 출자금 가입 後에도 원금손실, 인출제한 등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**중요정보를 출자금 통장에 명시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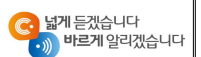
- (추진계획) 출자금 통장 및 가입신청서 서식 개정(각 중앙회장),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**'16.9월 시행 추진**

붙임 :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관리방안 추진상황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네이버, 다음, 구글 등 검색엔진에
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1. 담보평가의 객관성·적정성 제고

- ☐ 농·수·산림은 시행중, 신탁·새마을금고는 세부기준 마련 및 시스템 개발 완료후 금년중('16.12월) 시행 예정
- ① (자체감정 기준 균질화) 외부감정 확대, 시가탐문조사 의뢰대상에 신용정보회사 포함, 정성평가 보정한도 설정 등
 - ② (담보평가 절차 개선) 대출과 감정평가 업무의 분리, 평가결과에 대한 중앙회 검증기능(유사담보물건 평가사례 조회시스템 등) 등
 - ③ (감정법인 선정 개선) 감정법인의 무작위 선정, 부실 감정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 마련 등
 - ④ (기타) 자체 감정시 부동산점인계약서 여부 확인, 대출기한 연장시 담보물 재감정 기준 준수 등

2. 토지·상가담보대출(비주택담보대출) LTV 기준 강화

- ☐ 신·농·수·산림·새마을금고 모두 시행중
- ① (LTV 기본비율) 지역별·담보종류별 평균 경락가율을 이용하여 산정
 - ② (LTV 가산비율) 가산요인을 차주 신용도, 분할상환, 입지조건 등 리스크 유관항목으로 한정하고 가산비율도 최대 10%p 이내로 제한 등

3.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주담대 분할상환 적극 유도

- ☐ 관련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 개정을 완료('15.12.22.)하여 시행중
- ① '정상'으로 분류된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1%→0.5%로 하향('17년말까지 한시적용, 감독규정 §12)
 - ② 일시상환대출의 분할상환 전환시 종전 LTV비율 적용 대상을 만기 10년 이상 전액 분할상환에서 3년 이상 분할상환으로 하향(감독규정 <별표2>)

4. 기타 : 신용대출 모니터링 강화, 신용평가시스템(CSS) 고도화·선진화

- ☐ 신용대출 규모, 연체율 등을 분기별 모니터링하고 신용평가시스템 개발 등 지도
- ① 신탁 등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로 신용대출 증가가 다소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연체율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추진
 - ② 고객간 변별력 제고를 통한 정확한 대출심사 지원을 위해 신용평가 시스템의 주기적 개량 및 선진화를 지속 유도